

	<b>보도자료</b>	<i>힘내라 대한민국</i>
	2020. 10. 14.(수) 배포	

###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의 점검 및 보완
- ◆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과 실습생의 노동·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「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
- ◆ 고령 운전자보행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「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」 발표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0월 14일(수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####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」

-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29일(수),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
-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.

#### 【 대책 추진현황 】

- 먼저,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·제도 개선 상황을 발표한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점검하여,
-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.

- 현재, 취약계층 아동(드림스타트 대상자)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(~12월), 가정폭력 신고정보(경찰청) - 아동학대 정보시스템(복지부) 연결(~12월)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·공유를 진행 중이며,
  - 10월까지 전국적으로 ‘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’를 구성하여,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·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    - \* 시군구 아동보호팀(주관), 교육지원청, 경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또한, 2020년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‘아동학대전담공무원’을 배치(10.1. 기준)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,
  - \* 2020년 말까지 118개 시군구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
  - 2021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.
-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「민법」 제915조(징계권)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(2020년 10월 13일)하여, 국회로 제출될 예정(10월 16일)이며,
  -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 (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)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.
-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, 경찰 - 아동보호전문기관(이하 ‘아보전’) 동행출동 범위 확대\*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.
  - \* (기존)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 ‘응급 아동학대 신고’ → (개선) 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동행 출동 원칙
  - 특히,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(아동학대 처벌강화 TF) 구성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,

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.

- 한편,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**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**에 관련 예산을 **확대 편성**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**인프라를 확충**하고 예방·조기발견 등 **실효성을 제고**해 나갈 계획이다.

**2020년 추경 및 2021년 예산안 주요 반영 과제**

- ▶ **(’20년 추경)**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(심리치료도우미 등 지원, 21억 원),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보강(CCTV 등 설치, 24억 원) 등
- ▶ **’21년 예산안**
  - **(인프라 확대)** 아동보호전문기관·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(각 10개소),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(인건비 단가 2.9% 인상)
  - **(실효성 제고)** 신고의무자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(2억 원), 위기아동 예측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(16억 원)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(월 30만 원, 3년간 /신규반영) 등

**【 보완·추가 과제 】**

- 아울러, 최근 **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**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(9월)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**보완 대책**을 추진한다.
- ①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**방임·정서 학대 피해**에 대해서도 **적극적인 보호방안**을 마련한다.
  - ※ (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) 보호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, 학교·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이용 등도 거부
  - 먼저, 방임·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(시설 보호 등)를 명령할 수 있도록 ‘아동학대 처벌강화 TF(특별팀)’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,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.
  -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**지역사회·지역사회·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**한다.
    -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**사례개입 과정**에서 바로 **돌봄**

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**지침을 강화**하고,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**대리 신청**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.

- 또한, 학대전담공무원·아보전 등에서 **방임 확대**로 판단한 **피해아동**에 대해서는 **초등돌봄교실**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- 특히, 부모가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(아보전)가 **피해아동 사례관리**로 제시하는 **돌봄 서비스 이용**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**제재 규정**도 마련\*한다.

\*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,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「아동복지법」 개정

- ② 한부모가정 아동·청소년이 양질의 돌봄·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**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** 등 제재를 강화한다.

- ③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**신고자 보호 제도**도 보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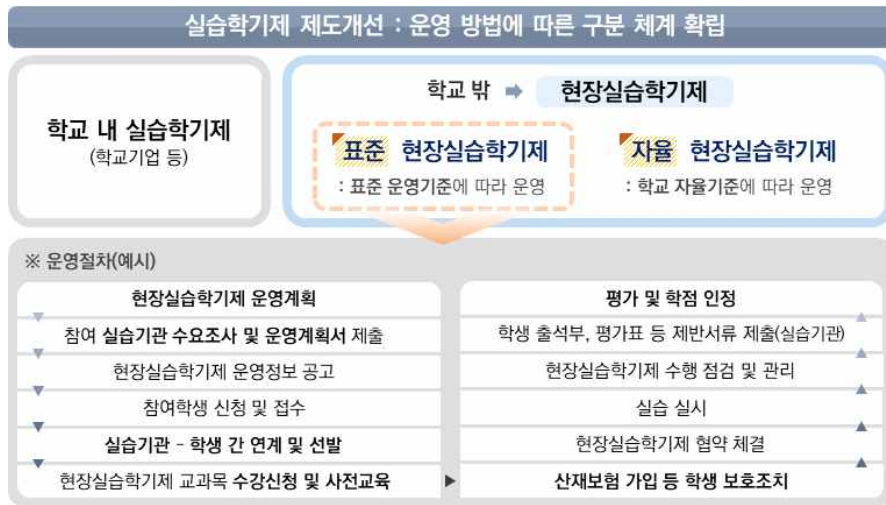
-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 예정(’20.11월~)으로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을 통해 무고·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,
- 신고자에 대한 **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**할 수 있도록 신고자 **책임감면 제도**도 확대한다.

-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**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**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**점검**하여,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광역 단위 점검체계인 ‘광역아동보호전문기구’를 통해 지자체 추진현황 점검 추진

**「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」**

- 이번 방안은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**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.**
- 먼저,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‘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’와 ‘**자율 현장실습학기제**’로 구분하여 체계를 확립하고, ‘표준 현장실습학기제’에 대해서는 **운영 기준,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.**



- 또한, 현장실습을 둘러싼 ‘**열정페이**’ 논란에 대한 **해결책도 마련한다.**
  -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,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**최저임금의 75% 이상**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.
  -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**자율 현장실습학기제**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**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\*** 하에

**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**

\* 학생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, 실습기관의 유지·운영에 필요한 단순·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 등 「무급 운영 요건」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가능

-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**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%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.**
  -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**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.**
    - ※ 실습기관이 부담하는 현장실습지원비(최저임금 75/100 이상)에 정부 지원금액분(최저임금의 25/100 이하)을 더하여 현장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, 대학이 정부 지원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
- 또한, 실습에 참여하는 **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.**
  -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**상해보험(대학), 산재보험(실습기관) 가입을 의무화하고,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**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.
  - 이외에도,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,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,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**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**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**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**
  - 우선, 대학생 현장실습 등 **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**

하여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,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'산학협력 우수기업(가칭)'으로 인증하여, 중소기업부·조달청·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행정·정책적 혜택\*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
※ 공공입찰 가점(조달청), 정책자금·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(중기부), 보증지원 우대(금융위), 실습기관이 지급한 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(기재부),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(국세청), 정기 근로감독 면제(고용부) 등

- 한편,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, 대체교과 개설·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1/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**「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」**

- 이번 안건은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'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'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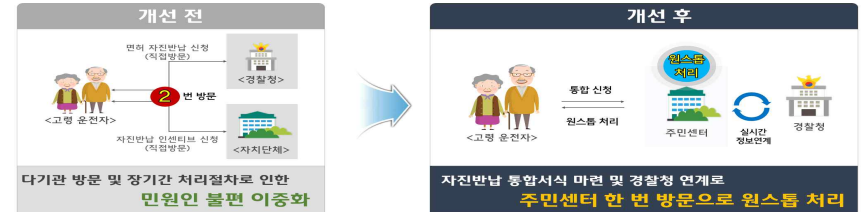
- 지난 9월 24일(목) 국회 교통안전포럼,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공청회를 거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.

-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.

-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.

- 이와 함께,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한편, '원스톱 시스템' 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.



- 이와 함께,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개선\*하고,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.

\* △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△최대 10개월이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

-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-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,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.

※ (현행) 조례로 정하는 시설 → (개정)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

- 아파트 단지,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
-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기반을 구축한다.

-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,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

‘셔클(shucle)’을 제공한다.

- 공공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% 이상 늘려나가고,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\*도 증차할 계획이다.

\* 놓어촌은 중형(7~9m) 저상버스, 광역 노선은 2층형 저상버스 등 운행 구간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

